

# 수렴과 상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본 동아시아 안보 역동성 평가

이 정 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 I. 루빅큐브?: 아시아 안보 개념화하기

지난 30년간 아시아는 주요 경제블록으로 부상해왔고 이에 걸맞은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 역량을 보유하게 되면서, 아시아 안보의 핵심 기반과 동력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해졌다. 첫째, 중국, 일본, 인도를 지칭하는 주요 3개국(the Big Three)과 주요 중진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들을 포함하는 아시아의 전략적 주요 국가들의 부상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인 균형을 이루는 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유례없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둘째, 1975년 베트남 전쟁 이후로 아시아에서 주요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시아는 규모 면에서, 잠재적이고 체계적인 영향력 면에서 그리고 국내정치적 파급력 차원에서 유례없는 안보 위협과 도전들에 직면해있다.

세계 어느 지역도 21세기 초 동아시아 지역과 같이 광범위하고 심각

한 안보상의 도전들에 직면해 있지 않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동아시아의 두 주요 지역인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가 갖는 안보인식과 접근방식의 상이함으로 인해 쉽지 않겠지만, 동남아 및 동북아시아 시각에서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 네트워크들을 이해하고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각국 시장, 상품 및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의존적으로 되어 가면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는 광범위한 공통의 안보적 요구에 응답해야 하나 중요한 측면에서는 꼭 배타적이진 않더라도 여전히 분리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강대국 간의 대결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 지역 국가들이 비전통 안보 사안들에 더 큰 민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가 지역 정체성과 협력적 안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것과 동북아시아가 강대국 간의 경쟁과 협력의 맥락 속에서 더욱 안정적인 지역 질서를 모색하려는 것은 단일의, 전체를 아우르는 어느 개념 혹은 이론도 아시아의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구심력 및 원심력을 쉽게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20세기 초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의 붕괴는 1920년대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형성될 때까지의 중국의 내전, 1937년 일본의 중국 침공, 1941년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산된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 등 반세기 동안 내전과 국가 간 전쟁을 불러왔다. 그리고 뒤이어 중국의 대약진 운동(the Great Leap Forward)과 문화혁명(the Cultural Revolution)의 형태로 중국 내부 격변이 발생했다. 아시아의 두 지배세력인 중국과 일본의 부상과 몰락, 새로 생긴 독립국들, 극심한 이념 대결과 갈등, 압축적으로 일어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급속한 세계화 등이 모두 한 세기만에 일어났다. 따라서 19세기 말 이후부터 아시아의 여정은 속도, 규모, 다양한 국내외 격변의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야후다 (Michael Yahuda)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아시아의 지역주의와 안보를 고려하면 우리는 중국의 여러 주변국들이 취약하거나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여겨져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난 50년 동안에 독립을 얻었고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식민지 유산을 갖고 있다. 이 식민지 유산은 각국의 국경선을 놓고 벌이는 장기적인 분쟁에 주된 원인이다. 현존하는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정치 체도를 설립해온 나라가 거의 없다.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국가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프로세스 속에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다지 놀랍지 않게 이들 국가 대부분은 자신들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들은 국가주권을 강하게 보호하려고 하고 외부의 개입과 간섭 문제에 민감하다.<sup>1)</sup>

동남아시아 주변국들과 대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근본적인 안보체제와 지배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강대국 간 상호작용과 세력균형 정치, 한반도 내 남북한 경쟁, 양안 관계 등의 전성 안보(hard security)에 의해 형성되고 이끌려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지역들은 동아시아의

---

1) Michael Yahuda, "The Evolving Asian Order," in David Shambaugh, ed.,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P. 349.

경제성장의 원인에 연유하는 공통점 이외에도 공통의 안보 사안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상하이까지 아시아 내에서 중산층이 부상하고 있고 이들이 이에 걸맞은 정치적 요구를 하는데다가 단 일정당 체제들의 향후 방향, 실패국가 혹은 이와 비슷한 상황의 국가들, (미얀마, 북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리나 아마 파키스탄까지 포함될 수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이 단행한 핵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인간안보 요구의 확산 등이 아시아 지역의 결코 쉽지 않은 안보도전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핵 비확산을 예외로 하면, 동남아시아는 인간안보 및 비재래적 안보와 관련하여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향후 20-3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안보사안들을 관리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글로벌 체제에 중대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시아에서 전례가 없이 경제력이 축적되고 있고, 군사력의 증강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세 지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새롭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군비경쟁이 시작되었다거나 아시아 지역에서 불가피 하다는 것을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21세기 초 아시아 안보지형에서 가장 주목할 만 특징 중의 하나는 “비록 아시아 내 어느 국가도 글로벌 차원의 군사대국이 된다가나 다음 10-20년 사이에 그렇게 될 것은 아니겠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이 명백하게도 지역 내 세력균형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sup>2)</sup>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방 계획자들이 전역(戰域)친구(theater peer)라고 칭하는 중국이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중국 그러한 전역친구가 된

2) Dwight H. Perkins, “East Asian Economic Growth and its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Asia-Pacific Review*, vol. 14, no. 1, (2007), p. 47.

다면 이는 비록 일본과 한국(혹은 통일한국 역시)이 중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갖는 민감성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더 많은 영향이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균형을 이루는 공식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9/11 테러 이전에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아시아 지역의 안정은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체제의 획득, 위기지역들에서 점증하는 정치적 긴장, 지역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시스템의 설치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저해되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로 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증강은 가속화 되어왔다. 아시아 지역 국방 지출과 무기획득 패턴을 조사해보면 아시아의 전통적인 위기 지역인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계속되고 있는 불안정성이 광범위한 영향을 지역에 행사하면서 경쟁적인 군비 증강을 부채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두 지역 모두에서 잠수함, 함정, 전투기, 모든 유형의 미사일을 포함하여 외부로 투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에 많은 자원이 사용 되고 있다. 이는 경쟁적인 군비 증강 프로세스가 군사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형의 무기들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sup>3)</sup>

흥미롭게도 중국의 엄청난 군에 대한 투자에 의해 상당히 유발된 아시아 지역의 점증하는 군사 현대화는 중국이 다자주의적 안보전선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5년 간 중국이 아세안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정도는 남중국해를 포

3) Robert Hartfiel and Brian L. Job, "Raising the Risks of War: Defence Spending Trends and Competitive Arms Processes in East Asia," *The Pacific Review*, vol. 20, no.1 (March 2007), p. 17.

함하여 동남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전략적인 영향력 범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아세안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미리 억제, 최소화 혹은 예방하기 위한 중국의 외교적 민첩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아시아와 글로벌 경제 사이의 점증하고 있는 필연적인 연계는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책임감 있는 글로벌 체제로의 진입을 연기하고 싶은 만큼이나 선택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이미 지나갔다. 아시아와 세계와의 유대관계는 되돌릴 수 없으며 세계 역시 아시아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없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의 부상과 이에 동반하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포함한 안보 사안들은 더 이상 지역차원의 접근법과 시각을 기반으로 해서 완벽하게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 아시아와 세계체제와의 연계가 깊어지면서 1997, 98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핵무장한 북한의 지속적인 여파, 중국과 지역 내 권위주의적 정권들 내에서 누적되는 사회적, 정치적 압력 등에서 드러나듯이 동북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 내 그 어떤 사건도 지역 전체와 심지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 주요 추세와 그에 따른 여파

대체적으로 냉전 시대의 위기상황들로 인해 나타났던 유럽의 근본적인 안보 딜레마는 사라지는 사이,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딜레마는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근 그루지아 사태가 보여주듯이 “냉전 2.0”을 준비할 태세가 되어 있는 러시아의 재등장은 서구와 러시아 사이에 새로운 긴장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sup>4)</sup> 하지만 러시아의 실지회복주의적인 충동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중반과 그 이후의 세계 안보의 윤곽을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형성할 지역은 아시아이며, 지역 내 주요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전략들과 정책들이 바로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안보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두 가지 연관된 추세들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는 강한 경제적 관계와 강대국들의 쇠퇴하는 영향력으로 인한 전례가 없는 협력의 기회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안보 딜레마 등장 가능성,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혼란, 아시아의 점진적 부상에 기반을 둔 정치적 변환들이다. 개념적으로 핵심 문제는 시장 중심의 안보 패러다임, 즉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 상호작용, 상호의존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역사적 유산들과 강화되어 가는 민족주의적 성향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파워 투사 능력 등을 과연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주요 요인들을 21세기를 형성하는 지금 시점에서 아시아 안보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아시아 지역 내 전략적인 핵심 주요국가들(중국, 일본, 인도,

---

4) C.J. Chivers, "In Georgia and Russia, a Perfect Brew for a Blowup," *The New York Times*, August 10, 2008. <http://www.nytimes.com/2008/08/11/world/europe/11ticktock.html>. 러시아의 그루지아 침공에 부분적인 반응으로 부시 행정부는 러시아와 민간 핵사용에 관한 초기 협정을 철회했고 러시아 총리와 지도자 푸틴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대선을 도와주기 위해 위기를 만들어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주장을 말외 안되는 것이라 거부했으며, 푸틴은 그 어떤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9월 12일에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저금리로 4000만 달러를 그루지아에 제공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러시아의 그루지아 군사침공은 강대국이 자국 내에 분리주의 운동을 편들기를 원하지 않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Keith Bradsher, "Loan to Georgia Illustrates Asian Dismay with Russia,"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2, 2008, <http://www.nyt.com/2008/09/13/world/asia/13aisa/html>.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역량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고, 이와 별 상관없이 아시아 지역 내에 더욱 복잡한 세력 균형이 존재한다. 둘째, 모든 차원 특히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일부를 포함하는 대 아시아(Greater Asia)의 하위 지역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강력한 영향력(경제, 군사, 정치)은 기회뿐만 아니라 불화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아시아 지역 내 삶의 질 향상은 급속하고 제어가 없이 진행된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도전들을 낳고 있다. 넷째, 주요 아시아 국가행위자들이 안보 도전들을 최소화하고 해결할 준비와 역량은 아시아 국가들의 전략과 선택에 의해 커질 수 있다.

비록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과 중동과 같은 다른 지역들도 여러 안보 도전들에 직면해 있지만, 아시아 지역이야말로 가장 광범위한 연성, 전성 안보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아시아 안보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대조적이면서도 중복되는 특성에 의해 더욱 복잡해진다. 지역 내 무역이 증가하여 두 지역이 더욱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만 현저한 안보적 위협과 위험들에 대한 접근방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에 서로 다른 역사적, 사회-정치적, 이념적 기반을 생각해보면 그다지 놀랄만 한 것은 아니지만, 두 아시아 지역의 지역 안보 규범과 사안들의 기원, 개념화, 운영방식 상의 차이 때문에 아시아 안보에서 무엇이 진정 “아시아적”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큰 제약이 존재한다. 중동 혹은 유럽 안보라고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아시아 안보라고 총칭하는 것 또한 아시아 지역 내 초강대국 미국의 존재, 현대화된 군사력의 축적, 글로벌 경



제행위자, 잠재력 있는 역사 유산들 때문에 아시아 문맥에서는 더욱 복잡해 질 수밖에 없다.

지역안보복합체(regional security complexes)의 시각에서 보면, 부잔(Buzan)은 냉전 시기 아시아 안보는 동북아시아 지역안보복합체, 동남아시아 지역안보복합체, 남아시아 지역안보복합체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고 주장해왔다.<sup>5)</sup> 하지만 탈냉전시기에서 그는 아시아의 안보구조가 아마도 더 광범위한 개념인 아시아 상위복합체(Asian Supercomplex) 속에서 있는 동아시아 지역안보복합체라는 개념으로 더 수월하게 이해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위 지역적인 특성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아시아 안보복합체의 등장은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세력의 확장에 대해 갖는 우려, 두 지역을 연결하는 제도상의 미흡 및 취약, 그리고 정치-군사적 안정성과의 강력한 연관을 가질 것으로 널리 생각되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의 부상과 같은 세 가지 발전에 의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up>6)</sup>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와 같은 학자들은 아시아는 현재 진행 중인 6자 회담을 아세안,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 +3,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더 포괄적인 다자안보 및 무역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후쿠야마는 “아시아의 다자주의는 지역 경제를 조율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 국가에 내제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sup>7)</sup> 많은 여러 관찰자들은 동

5) Barry Buzan, “Security Architecture in Asia: the Interplay of Regional and Global Levels,” *The Pacific Review*, 16:1, (2003), pp. 145-148.

6) Ibid., p. 160.

북아시아에 비해 동남아시아가 갖고 있는 다자주의적 이점을 언급하곤 한다. 상대적으로 동북아시아에 다자 안보기구가 부재한 것을 놓고 보면 사실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다자주의적 전통”이 과연 동아시아로까지 쉽게 확장될 것인지 혹은 아세안의 최소주의적 집단 안보 노력이 이 지역의 현저한 안보적 위협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 2.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간의 연계(linkages)와 상이(divergences)

비록 이 두 지역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미국의 역할을 바라보지만,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안보 지형 상에는 미국이 양자적 안보동맹을 통해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공통된 특성이 물론 있다. 일부 관찰자들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대조적인 것을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분석했다. 첫째,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동남아시아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존재는 미국의 동맹과 협력자들을 저장도 분쟁과 내부 갈등으로부터 일부 구해내지 못했으며 이 같은 사건들에 오히려 일조를 했다는 것이다. 셋째로 비록 강대국들이 지역안보라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주요 행위자로 보일 수 있을지라도 동남아시아의 경험은 “더 취약한 지역 국가들과 기구들이 지역 안보 공급자들과 마찬가지로 잘 기능했다”는 것이다.<sup>8)</sup>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역 안정에 도움이

7) Francis Fukuyama, “Re-Envisioning Asia,”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5)

8) Amtav Charya and See Seng Tan, “Between Balance and Community:

되는 세력균형을 공고히 하기 위해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활발한 안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시장의 매력은 커지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 간 무역관계가 더욱 더 강화되는 것은 두 지역을 묶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가고 있다. 조류독감, 자연재해 사스, 초국가 범죄와 테러리즘과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비재래적 안보 사안들 역시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다.

탈냉전 이후 아시아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중국의 성장하는 영향력이 아시아 모든 곳에 뻗치고 있다는 점이다. 14개국과 국경을 직접 접하고 있으면서, 4개 아시아 하위 지역과 접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은 외교정책 상의 아시아화(Asianization)가 동아시아의 모든 주요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가 향후 20년에서 30년 간 이러한 중국에 반응하고, 중국의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며, 대응하는 방식이 아시아 안보의 새로운 필수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이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연계가 되어있다고 하는 만큼 두 지역 간의 안보의 범위를 고려할 때 차이점들도 상당히 존재한다. 총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은 세계 강대국들이 수렴해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정치-공간적 특이성으로 인해 이 지역이 주요 강대국 이해관계와 역량의 지렛대가 지속적으로 되어왔음을 상기시켜 준다. 이러한 사실이 아마도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 뒤에 있는 추진력

---

America, ASEAN, and the Security of South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6 (2006), p. 39.

을 평가하는 데에 과장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서 강대국들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의 규모와 내용은 그 자체로 매우 상당하다.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마지막 전선으로 남아있고, 북한의 핵 문제와 매우 최근의 북한 정권의 추이는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sup>9)</sup> 그러나 아시아의 부상과 함께 아시아 역사에서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이(최근에는 인도까지 포함해) 동시에 이와 같이 강력했었던 적은 없었다. 수 세기 동안 중국이 강했고 일본은 빈곤했지만 지난 200년 대부분 동안 일본이 강력했고 중국이 약했다.”<sup>10)</sup> 더욱이 주로 중국과 인도인 이들 주요 아시아 거대국가들 내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혼란의 분출은 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지역을 다시금 요동치게 할 수 있으며 아시아의 다른 중진, 소국가들에게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경제적 패권은 198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도전을 받아왔고, 이는 2030년 혹은 2040년 경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세력전이를 암시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Gold Sachs)에서 나온 2003년 보고서인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9) “North Korean Leader is Very Ill, U.S. Official Says,”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9, 2008. <http://www.nytimes.com/2008/09/10/world/asia/10korea.html>.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북한의 60주년 기념일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가 뇌졸중에 의해 쓰러졌었다고 보도가 되었다. 북한 관리들은 즉각적으로 외신보도들이 “가치없을 뿐만 아니라 음모설책”이라고 부인했고 평양은 공공연한 경계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한국과 다른 정보기관들은 공식적인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김정일이 심각한 건강문제를 갖고 있다고 믿는 듯 보였다. 김정일이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서 보인 것은 8월 중순 군시설 방문할 때였고 그 이후로 보이지 않았다. 2004년 김정일은 또한 40일 가량 드러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그가 심각한 사고 혹은 주요 건강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는 추측을 무성케 했다.

10) James F. Hoge, Jr., “A Global Power Shift in the Making,”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4),

인도, 중국)를 꿈꾸며(Dreaming with Brics)'는 브릭스가 2050년 경 글로벌 경제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 예견했다. 최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골드만 삭스는 인도의 GDP가 미국의 GDP를 2050년 전에 추월하거나 인도가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중국이 노동인력 부족, 고령화, 인구 최대국을 관리하는 일 등의 과제를 앞에 두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골드만 삭스는 여전히 중국이 2040년 경 1인당 국민소득은 아닐지라도 GDP에서 미국을 초월할 것이라 주장했다.<sup>11)</sup> 새로 형성된 부와 팽창하는 경제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세 주요 행위자들이 지난 20년간 국방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해온 결과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수월하고 공격적이며 장거리로 파워를 투사할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민족주의의 고양은 2005년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주요한 관심 사안이다. 이 보고서는 부분적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한국의 세대 변화, 일본의 경제적 지배력의 감퇴가 이따금 폭력으로 변질되는 외국인혐오증을 확산시켰다고 언급했다.<sup>12)</sup> 확실히 동북아시아가 심화된 정치-군사 경쟁으로 진입했다고 말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지만 국가 역량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학자들은 종종 각국의 역량들이 향상된 것에 자체에 위험성이 존재

---

11) *BRICs and Beyond*, (New York: Goldman Sachs, January 2007), pp. 12-56, 2030년경 중국의 1인당 GDP (2005년 물가 기준으로는) \$22,000이 될 것이지만 이는 미국의 \$61,000 보다 한참 밀도는 수준이고, 일본 (\$60,000)과 독일(\$51,000)에도 못 미친다.

12) International Crisis Group, "Northeast Asia's Undercurrents of Conflict," Asia Report no. 108, December 15, 2005, p. 3.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치, 금융, 안보 도전들을 다룰 수 있는 다자주의적 기구가 거의 부재한 점을 지적한다. “비교분석의 시각에서 보면 동북아시아는 비공식 메커니즘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할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제도 및 기구 면에서도 그 어떤 지역과도 차이가 많이 난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에서 이러한 점은 명백히 지속되고 있다.”<sup>13)</sup> 북한 핵문제와 같이 두드러진 안보 위협에 집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6자회담이 2003년에 만들어지고, 6자회담의 전반적인 성공 이후로 6자회담은 아시아의 하위 지역 안보 신뢰구축조치(CBM)로 전환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당분간 다자안보 규범의 공식화는 주요 강대국 간의 정치와 동북아시아의 핵심 안보 도전들의 규모에 상당한 구속을 받을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 분쟁이 한창 고조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불협화음이 생겼던 당시인 1967년 아세안 창설은 제도화된 다자협력을 위한 아시아의 첫 번째 노력이었다. 한 관찰자가 말하기를, “1997,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아세안은 세계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가장 성공적인 다자 정치기구로 여겨졌다.”<sup>14)</sup> 하지만 창설 이후 40여년동안 ARF와 APT 회담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총체적인 효과는 논란이 되는 주제이다. 동남아시아의 다자적 성과를 옹호하는 사람은 세 가지 주요 발전들을 지적한다. 첫째, 비확성 및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전염병, 자연재해, 환경오염, 초

13) Kent Calder and Min Ye, “Regionalism and Critical Junctures: Explaining the Organizational Gap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4 (2004), p. 191.

14) Sheldon W. Simon, *ASEAN and its Security Offspring: Facing New Challenges*, (Washington, D.C.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p. 1.

국가적 테러리즘 등과 같은 특히 비재래 안보사안들과 관련하여 공통의 안보도전을 다루는 데에 성과를 이루었다. 둘째, 안보도전에 지역 차원의 접근이 아직 첫 단계라고 하더라도 최근 발족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n Summit)를 포함하여 제도주의가 느리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셋째, 결과 중심의 다자안보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sup>15)</sup>

반대로 아세안의 노력들이 주요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종종 불간섭과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과 확장과 연관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곤 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아세안의 비가입 원칙은 회원국들이 민감한 정치 사안들에 행동을 취하거나 발언을 하지 못하게 효과적으로 봉쇄했다. 베트남(1995년), 라오스(1997년),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의 아세안 가입으로 아세안은 미얀마와 같은 회원국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위반에 대해 국제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국내 비판 역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세안 헌장(the ASEAN Charter)은 주요 회원국들로부터의 저항으로 인해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핵심 정치적 안보 사안들을 담당하고자 하는 아세안의 능력은 불간섭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의해 방해를 받아왔다. 아세안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포함하여 10개국의 회원으로 확장이 되면서 아세안의 불간섭 원칙은 점점 더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 아세안의 팽창은 사실상 배타적 경제수역(EEZs)의 중복이라든지 미해결 상태의 해상국경, 태국-베트남, 베트남-캄보디아, 미얀

15) Mely Caballero-Anthony, "Nontraditional Security and Multilateralism in Asia: Reshaping the Contours of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Policy Analysis Brief*, The Stanley Foundation, June 2007, p. 2.

마-태국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는 양자 영토분쟁과 같은 새로운 안보적 부담을 야기했다.<sup>16)</sup>

### 3. 아시아의 두 가지 도전에 대한 대응

대부분의 경우 2030년경의 동아시아는 더 안정적이고 제도화되었으며 협력적인 안보와 경제 레짐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아시아 버전의 루빅 큐브 혹은 기회와 잠재적 혼란의 혼합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지역 안보 구조가 향후 등장하게 되더라도 다음의 세 가지 서로 연결된 일들에 의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의 많은 부분이 소비될 것이다. 첫째, 혼란과 그에 따른 여파를 갖는 모든 수준의 사회, 국가들에서 가속화된 세계화에 수용 및 적응하기, 둘째 민주화, 분권화, 지방화에 대한 더 많은 요구들에서 연유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과제들과 특히 권위주의정권에 의해 통치를 받거나 실패 국가들의 경우 고통스러울 수 있는 정치적 전환에 동반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셋째 지역 안보 요구와 함께 국가안보 필수요건들을 취합하고 재래 및 비재래적 안보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등이다.

에버린 고(Evelyn Goh)는 어둡고 폭력적인 지역 내 세력 경쟁을 암시했던 초기 예측들은 다음의 두 가지 발전에 의해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지역적 다자주의 기구들의 설립으로 국가 사이의 교역을 조절하고 규범을 개발하며 지역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강대국들 사이에 협력을 제도화하고 중국을 사회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

16) Simon, *ASEAN and its Security Offspring: Facing New Challenges*, p. 6.



의 이 지역에 대한 안보약속을 유지, 촉진시킴으로써 잠재적 중국의 세력 혹은 다른 세력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다.”<sup>17)</sup>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들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만약 지난 20-30년 간 아시아의 계속된 부상이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다양한 격변의 역사들과 비교될 수 있다면 21세기 초반 아시아는 결정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국제화되었으며 더 부유해졌다. 어느 다른 지역도 식민주의 유산과 경험,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갈등과 격변,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연자원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반면, “새로운 아시아(New Asia)”는 더욱 안정적인 글로벌 체제에 기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아시아의 부상을 명백히 폭력에서부터 자유롭고 더욱 중요하게는 서구의 실패와 강력하게 연관시켜야 하는 현상으로 동일시하는 학파의 옹호자들은 바로 정확히 아시아의 부상으로 인해 제기되는 곤경을 파악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가장 첨예하게 지닌 자가 바로 키쇼어 마흐부바니(Kishore Mahbubani)로서 그는 “동양의 성공”에 대한 대척점으로서 소위 말하는 “서구의 실패”에 대한 글들을 널리 집필했다. 서구의 여러 결함들에 대한 최근 비판에서 그는 “서구는 자신들이 지배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아시아의 세기가 왔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결과, 서구는 또한 주요 글로벌 문제들을 다루는데 점점 더 무능력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sup>18)</sup> 더욱이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7) Evelyn Goh, “Great Power and Hierarchical Order in South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3 (Winter 2007/08), pp. 113-114.

18) Kishore Mahbubani, “The Case Against the West,” *Foreign Affairs*, vol. 87, no. 3, (May/June 2008), pp. 111-112.

아시아의 경험은 서구의 원조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반면 국내 거버넌스가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야말로 세계사에서 아시아의 위대한 공헌이 될 것이다. 아시아의 성공은 다른 대륙의 다른 사회들에게 이를 모방하고자 하는 자극이 될 것이다.... 서구는 아시아의 진전을 반기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세계기구들에서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보호하려는 서구의 단기적 이해는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계질서를 형성하려는 장기적인 이해를 압도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서구는 세계의 주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역할에서 가장 큰 단일 부담이 되어가고 있다.<sup>19)</sup>

의심 없이 집합적 의미로서 혹은 더 넓게 말해 정치-경제적 아이디어로서 서구는 많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고 이들의 정책들 역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서구의 주요 국가들도 자신들의 핵심 국가이익이 걸려있을 때는 그것이 인권, 민주화, 핵확산, 기후변화이든 상관없이 이중적 기준을 내세운다. 하지만 서구에 반대하는 측면에서 그저 편승하는 것에 기반을 두는 아시아의 정체성은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것이며 궁극적으로 아시아의 자부심에 해로운 것이다. 아시아의 가치는 얼마나 아시아가 서구를 싫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가에 기반을 둔 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시아 부상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아시아는 스스로 더욱 자신감을 갖고 자기 반성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19) Ibid., p. 124.

민주적 가치와 제도들을 온전히 수용하고, 선진화되었거나 거의 선진화된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게 서구 혹은 보편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민족적 혹은 문화적 유산을 배제시켜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모든 수준의 사회에서 굿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굿 거버넌스 역시 자유주의적 사회들과 개방적인 정치제도들과 상호배타적일 필요는 없다. 한국과 대만이 권위주의에서 민주정체로 지난 20여년 만에 전환을 이룩한 것이 보여주듯이 한 국가의 문화적 DNA를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며,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받아들이고 굿 거버넌스를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아시아와 민주가치들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보편적인 가치들이 서구가 독점하고 있거나 서구가 만든 것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전례가 없는 환경재앙들과 관련 시한폭탄들, 상대적으로 저개발상태인 국가들에서의 폭발적인 출산율, 에너지와 식량 불안정, 부서지기 쉬운 정치제도와 정당들, 비재래적 안보위협 등에서 아시아의 그 어떤 개별 국가도 이러한 사안들을 스스로 다룰만한 능력이 없다. 더욱이 지역과 세계체제에 잠재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는 아시아 지역 내에 연쇄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두 대조적인 미래 사이에서 능숙하게 아시아의 균형을 잡는 것이야말로 아시아의 존재차원에서 안보적 임무라고 할 수 있다.

## II. 동북아시아의 안보이해관계와 향후 방향

1975년 베트남 전쟁이 종료된 이후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는 비록 이러한 평화를 지속시키는 것이 지역 내 전략적 주요국가들과 세계체제 차원의 유례없는 정책조정 능력을 앞으로 필요로 하게 될지라도 장기간 평화(long peace)를 향유했다. 1840년대 아편전쟁 이후로 내전과 국가 간 전쟁들은 예외라기 보단 규범이었고, 서구 제국주의, 19세기 말 청나라의 급속한 쇠퇴,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부상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1910년 일본에 의한 한국의 합병은 아시아의 가장 오래 지속되어왔던 조선 왕조(1392-1910)를 무너뜨린 것이었고 이듬해 청 왕조의 멸망과 함께 동북아시아 내 중화중심의 세계관을 깨트렸다. 제2차 세계대전 끝 무렵 일본제국주의의 궁극적인 쇠퇴는 동북아시아 역사에 독특한 시대를 열었다. 즉 아시아 내 어느 국가도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빈자리는 동아시아에 뒤늦게 개입한 서구 세력인 미국에 의해 메워졌고, 이는 더 넓게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미국이 전략적인 지도력을 담당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주요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쉽게 보인다면, 반면 동북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이 지역을 놓고 보면 공식 핵보유 국가가 세 국가이고, 육군 규모로 최상위 5개국이 있으며, 북한과 같은 새로운 핵 확산 국가가 또한 존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 서비스 공급국이 또한 동북아시아에 있다. 경제적 핵심 기둥으로서 아시아의 부상은 세계경제와 되돌릴 수 없는 연계를 낳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세계경제는, 아시아의 석유 및 다른 에너지 자원들에 대한 전례 없는 갈증이 다음의 <표 1>에서 보여주듯이, 주요

아시아 시장의 변동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1세기 초 동북아시아는 “공고화된 평행(entrenched parallelism)” 혹은 세계경제에 주요 동력으로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안보 문제를 지닌 지역으로서 이 같은 두 서로 연관된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는 또한 상당히 취약한 협력적 문화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비록 완전히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유산과 양자적 국경 분쟁 그리고 민족주의와 같은 국내정치적 요소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거나 더욱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현저한 안보 딜레마를 완화시켜 주겠지만 근본적으로 주요 강대국들 간의 경쟁과 협력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표 1〉 석유 소비 상위 10개국

상위 소비국	하루당 배럴 (bbl/day)
1. 미국	20,730,000
2. 중국	6,534,000
3. 일본	5,578,000
4. 독일	2,650,000
5. 러시아	2,500,000
6. 인도	2,450,000
7. 캐나다	2,294,000
8. 한국	2,149,000
9. 브라질	2,100,000
10. 프랑스	1,970,000
세계 전체	82,234,918

출처 [http://www.nationmaster.com/graph/ene\\_oil\\_con\\_energy-oil-consumption](http://www.nationmaster.com/graph/ene_oil_con_energy-oil-consumption)

## 1. 거인들 상대하기: 동북아시아에 불안정성과 협력의 원천

동북아시아의 안보 미래와 방향을 평가하는 것은 세계체제 내에서 이 지역이 갖는 정치, 경제, 군사력과 인구 측면에서의 중요성에 의해서 더욱 복잡해진다. 2006년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중국, 일본, 한국이 세계 GDP의 16%를 차지하며 만약 미국과 러시아를 여기에 추가하면 수치는 46%로 높아진다. CIA World Handbook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세계 국방지출이 약 \$1.2조로서 그 중 미국이 \$6230억 혹은 세계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중국, 일본, 한국, 북한은 \$1330억 또는 13%를 차지한다. 세계 상위 10개 석유소비국들 중 중국, 일본, 한국이 전체 세계 석유소비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이 동북아시아의 영향력의 정도와 깊이와 필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전지구상의 부, 군사력,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동북아시아의 몫을 보여준다 하겠다. 요약하면 국제체제와 이 지역 국가들 간의 되돌릴 수 없는 연결에도 불구하고 세계 체제의 형성은 점진적으로 주요 동북아시아 국가들 내의 행동, 전략, 발전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세계관이 19세기 말에 붕괴되고 처음으로 동북아시아의 부상은 세계질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왔고 21세기 중반까지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판단할 때, 비록 한반도와 양안관계가 성공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혹은 동아시아가 강대국의 경쟁의 소용돌이에 마냥 휩싸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실로 동북아시아에서 수행된 지난 마지막 전쟁은 한국전쟁(1950-1953)이었다. 동북아시

아에서 국가 간 전쟁의 가능성은 탈냉전 이후 제일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2006년 10월 핵실험, 중국의 전략적인 군현대화, 일본 자위대의 점진적으로 정교해지는 해상역량 그리고 러시아 군의 재정비 등은 비록 전통적 의미에서 군비경쟁은 아닐지라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경쟁이 서서히 진행 중에 있음을 암시한다. 저명한 한 학자는 “무기 수출 증가에 수반하여 군비 지출의 증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인도, 호주는 모두 향후 10년 동안 집행될 수십억 달러를 군 현대화 프로그램에 준비하였다.”<sup>20)</sup>

하지만 만약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제외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무력분쟁의 잠재적인 촉진제를 생각해본다면 주요 위기를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와 똑같은 이유에서 양안관계 역시 전면적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유동적이고 일직선적이지 않은 시나리오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장기간의 지속적인 위기들이 동북아시아의 혹은 이 지역과 연관된 국가들의 위기관리 역량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 및 경제적으로 미국, 유럽 다음으로 세 번째 기동인 동북아시아의 부상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통합, 약화되는 갈등을 위한 촉진제로서 기능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성장은 또한 전례 없는 혼란, 취약성, 파급되는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시아의 부상은 이 지

---

20) Ashley Tellis, “Military Modernization in Asia,” in Ashley Tellis, ed., *Strategic Asia 2005-06: Military Modernization in an Era of Uncertainty*, (Washington, D.C.: National Bureau of Asia Research, 2006), p. 19.

역에서 장기적인 위기들이 글로벌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주요 안보 사안들 그 어느 것도 본질적으로 국내적이거나 지역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 내 발전이 세계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공격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행동들을 제어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면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성의 주요원천은 더 이상 공격적인 강대국의 전략들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국내 요소들, 내적인 외적인 충격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주요 전략적 발전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주로 연유한다.

## 2. 중국의 전략적 진출과 제약

국내 사안들에 대한 주요 집착이 중국과 같은 국가가 주요 외교정책 사안들을 외면하거나 가볍게 생각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로 중국의 전례가 없는 에너지 수요만을 기초로 해도 중국이 에너지 및 자원이 풍부한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진출하는 것은 1960년대 이후로 매우 활발해져왔다. 소위 말하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일본의 시도는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정치적 공간의 잠재적인 확장을 상쇄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 영향력의 우월성을 제어하는 외교적 역할을 강화하게 했다.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수용적인 전략들을 채택하고 있다면 이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보이는 온건함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라 최소한 미국의 영향력에 역속하는 한 방편으로 그러는 것이다. 중국은 지역 행위자들이 중국이 아닌 미국을 향후 어느 순간에 택하도록 하는 것을 더



욱 어렵고 비용이 들게끔 만들기를 원한다.”<sup>21)</sup>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시아에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확장하려는 자신의 욕망 가운데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자국 내 도전들에 의해 구속을 받을 것인가에 있다. 늘어나는 소득 격차와 불평등,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 구조에서 개방성과 개혁에 대한 늘어나는 압력,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한 중산계층의 증가, 그리고 일당 독재와 시장경제의 잘못 짝지어진, 정치적으로 분열적이며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혼합 등이 중국의 지도층으로 하여금 향후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리도록 할 것이다.

중국사에서 중국이 지금처럼 세계와 서로 엮이고 지도자들이 세계화와 그에 수반하는 결과들을 다루도록 강요받는 때는 없었다. 이는 아마도 1978년 덩 샤오핑의 리더십 아래 시작된 중국의 대담한 개혁들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조는 오늘날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 냉전 시대 혹은 9/11 테러 이후의 시대와도 양적,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위협들과 도전들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혼합 위협(Hybrid Threats)들을 다루는 것은, 최소한 세계 체제 내에서 큰 혼란 혹은 지역 내에서 혼란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제도적 안정성과 통합을 위한 복구 및 회복비용이 어느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등의 가능성이 무시될 수는 없지만 안보, 정치,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미숙하게 관리하게 되면 큰 동요가 닥쳐올 수 있기에 호전적이고 쉽게 갈등 상황에 빠지는 국가안보정책들과 전략들이 줄어

21) Thomas J. Christensen, “Fostering Stability or Creating a Monst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31, no. 1 (Summer 2006), p. 125.

들 수 있을 것이다. 명백하게 가장 중요한 개념적 질문 중의 하나는 바로 증가하는 경제적 연계와 점증하는 통합이 가장 긍정적인 행동상의 변화 즉, 글로벌 혹은 보편적인 규범들을 수용하고 국내적으로도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지난 20-30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지역 내 무역과 경제협력 영역에서 존재한다. 중국은 2005년 미국을 넘어서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이 되었고 일본과 중국의 양자 무역 규모는 2006년 \$1840억에 해당한다. 사실상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던 시점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점은 분명하다. 지난 30년 동안 이 두 아시아의 강대국들은 주요 경제 협력자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강화된 무역 및 경제 연계가 동등하게 정치적 관계로 나아갈지는 국내정치, 역사적 유산, 대조적인 지정학적 이해관계, 예를 들면 미국의 주요 역할과 같은 문제로 인해 좀 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6자회담이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중국과 일본 지도자들이 이 기구를 통해 협력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확실히 북한의 향후 전개가 여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김정일 사후 북한 정권에 대한 매우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정책과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자회담 내에서 협력이 필수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와 같은 반-테러리즘 등의 다른 안보 사안들에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도 아니다. 실로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 전역 미사일방어 시스템, 남사군도(Spratly Islands), 남중국해에 대한 인식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역 내 전략적

주요국가들 중 그 어느 국가도 지난 30년 간 존재해왔던 안정과 상호 번영이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더욱 제도화된 협력적 구조를 위한 꼭 필요한 조건은 증가하고 있고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경제적 연계와 유대관계에 기반하여 정치적 협력을 찾으려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는 중국, 한국, 일본 모두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남을 것이다.

### 3. 한반도의 가능성과 영향

북한이 협상을 통해 비핵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글로벌 차원에서 비확산 레짐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주요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시험이 될뿐만 아니라 남북한 통일이 가능성으로 현시될 때 강대국 간 협력의 중요한 시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생존력이 전략적 완충지대로 남는 것에 의존한다면 핵 카드는 북한 정권에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봉착 및 6자회담 프로세스의 성공과 실패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다.<sup>22)</sup> 북한정권의 핵심적인 목적과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특히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생명을 연장할 정도의 지원을 계속해서 받는다면, 북한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고려할 점은 통일 이후 시대를 포함하여 한반도 전환기에 한

22) 6자회담의 간략한 개관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James L. Schoff, Charles M. Perry, and Jaquelyn K. Davis, *Nuclear Matters in North Korea*, (Westwood, MA: PotomacBooks, 2008).

국의 전략적 선택이 축적되어 가져올 결과들이다. 정치적 해결, 점진적 통합, 붕괴와 흡수 또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무력갈등을 통해 한국의 리더십 아래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통일정부의 정치적 지형과 전략적 선택들은 통일한국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주요 강대국들 특히 중국과 미국이 통일 프로세스를 얼마나 지지해줄 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흥미롭게도 많은 외부관찰자들은 한국이 중국 측으로 기울었다고 했지만 한국이 중국에 대해 보이는 전반적인 제안은 더욱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sup>23)</sup>

비록 여러 통일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것은 이 논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인 협상을 통한 통일은 남북한 갈등의 긴 역사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무력을 통한 통일은 그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반면, 북한이 붕괴하고 통일이 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전략적 외형은 북한 위협의 와해, 강대국 경쟁의 잠재적 증가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 통일한국과 미국 사이에 일치하는 안보적 이해관계의 정도, 통일한국의 역량에 기초한 안보 및 국방 계획, 그리고 통일한국의 정치적 열망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한국은 핵심 국가안보 이익을 미국과의 강한 동맹을 통해 지킬 수 있어왔고 이러한 형태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맹이 홀로 한국을 통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을 위한 작업은 더욱 복잡하고 정치화될 것이며 북한의 협소한 출구전략과 연관된 불확실성 때문에 분열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

23) Jae Ho Chung, "Dragon in the eyes of South Korea," in Jonathan D. Pollack, ed., *Korea: The East Asian Pivot*, (New Port, RI: Naval War College, 2004), pp. 253-266.

다. 동시에 한국은 이미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지만 중국과 증가하는 경제적 연계를 더욱 향상시키는 방안을 개념화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전환이 만약 변덕스럽거나 혼란스럽게 된다면 사실상의 비토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올지도 모르는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억지시킬 수 있는 방안 역시 개념화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주요 강대국 간의 협력은 이미 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했고 정치적 영역에서도 6자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간헐적인 진보를 이루어왔다. 한반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주안점들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93-1994년 첫 핵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2002년 10월 2차 핵 위기로 지나가면서 그리고 최근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까지 주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한반도 내에서 주요 위기발생 혹은 전쟁을 피하는 방향으로 수렴해왔다. 최소한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주요 강대국들과 한국은 한반도 내에서 혼란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높은 수준의 이해관계의 수렴을 보여 왔다.

둘째, 북한의 2006년 10월 핵 실험은 한국, 미국, 일본에 여전히 중대한 군사적 정치적 위협이 되었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의 주요 전략적 변화를 유발했다. 비록 증거는 상황적인 것이지만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매우 분노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단지 북한이 중국에게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핵 실험이 또한 중국의 핵심적인 전략적 이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리라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 성향과 더욱 중요한 것으로 김정일 사후 북한정권을 준비하는 것은 북한과 역사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려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튼튼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동

아시아의 불안정성의 주요원천들을 억제하는 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문맥에서 대담하지만 또한 매우 위험한 대북 포용전략을 구사할 한국의 능력은 한국 내 미군의 존재 없이는 불가능했을 수 있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북한을 상대로 방어와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뿐만이 아닌 지역 내 주요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한국의 상대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확장하는 데에서도 연유해야 할 것이다.

### Ⅲ. 아시아 안보와 전략적 관리

아시아 안보를 예견하는 것은 언제나 진행 중인 일이지만 냉전 종식 이후 추이를 보면 아시아의 21세기로의 진입은 20세기 초반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한 갈등 트리거들과 함께 놀랄을 정도로 더욱 안정적이다.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 목표들은 가능한 한 글로벌 경제와의 확대되고 깊어진 연계를 받아들이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허약했던 1900년대 초의 아시아와 대조적으로 오늘날 아시아 지역 경제의 대부분은 개방된 시장, 에너지 및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사람, 문화,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서구 제국주의의 마지막 특권은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면서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북한과 미얀마 같은 이 지역 내 두 이단아들과 라오스와 같은 자유시장개혁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지역 내 거의 모든 경제들은 글로벌 경제와 더욱 굳건해지고 되돌릴 수 없는

유대관계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아시아 지형의 중요한 특성이 될 것이며, 사회·경제적 발전은 지정학적으로 열악한 상황 아래에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전할 수 있는 아시아의 핵심 유산이 될 것이다. 일본이 전후 회복을 하고, 네 마리의 호랑이(the Four Tigers)들이 일본의 수출 중심 성장을 따라 발전하면서, 동북아시아는 아시아의 산업화를 주도했다. 시장친화적인 국가경제 정책들이 없었다면 지난 15년 동안 아세안의 확장은 불가능했을 정도로, 1970년대부터 싱가포르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들에 의해 이와 비슷한 정책들이 또한 추구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전반적인 시장친화적 경제와 무역 정책들과 전략들이 동등하게 정치와 군사 영역에서 긍정적인 행동상의 변화를 이끌어 올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가 정치적 분쟁들을 극복하는 데 큰 성과를 보여왔고, 한반도와 대만해협과 같은 분쟁에 매우 취약한 지역에서도 무력상용이 지난 50여년간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왔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시아가 성공적으로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백년 간의 갈등(Hundred Years of Conflict)”에서 벗어나면서, 다음의 다섯 가지 사안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첫째, 아시아의 전반적인 전략적 지형을 형성하는데 중국 요인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기에 중국의 부상에 대한 더욱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 내 현상유지에 반하는 패권국의 등장을 막으려는 미국의 중심적 역할을 놓고 볼때,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을 완화시켜야 하며, 강대국 간의 충돌을 또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내 계속되고 있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뒤를 이어 발생할 확률이 높은 한국이 통일이 되는

상황과 같은 핵심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s)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정치, 경제적 전환들을 촉진시키고 이 지역이 예를 들면 중국과 미국 간 해상에서의 잠재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것처럼 강대국 경쟁의 새로운 지역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국가안보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더욱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전후 기간 이후 아시아가 글로벌 경제의 세 번째 기둥으로서 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향후 중대한 도전들은 새로운 전략적 문화를 이에 걸맞은 제도에 주입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역 내 분쟁과 주요 강대국 간의 충돌의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아시아는 주요 안보 위기들을 극복했거나 최소한 공동으로 관리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지역 내 국가들이 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의 근원에 정확하게 기반하여 등장하고 있는 도전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덜 가진다면,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아시아는 더 이상 존재차원에 위협을 주는 국가 간 전쟁을 우려할 필요가 없지만 연쇄적이고 중첩되어 나타나는 여러 위기들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관리 역량을 탈냉전 이후 아시아가 부상한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시험하려 할 것이다.\*